

2025년 3분기

정책건의 자료집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 보고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년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대주제 및 건의방향의 대강을
• 정하고 8개 분과위원회의 소관 주제별 논의(2025.7.8.~7.21.)를 •
거쳐 228개 국내 협의회 정기회의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 차

통일 · 안보분과	• 통일·대북정책의 도전요인과 대응 방안	05
인권 · 탈북민지원분과	• 북한인권 정책 및 탈북민 지원 방안	15
국제협력분과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27
경제 · 과학분과	• 남북대화채널 복원과 평화경제 여건 조성 방안	37
교류 · 협력분과	•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49
종교 · 민족화합분과	•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종교 분야의 역할	59
국민소통분과	• 지속가능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방안	69
청년분과	•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	81
붙임	•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및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91

통일·대북정책의 도전요인과 대응 방안

통일 · 안보분과위원회

요약

□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

- 통일·대북정책의 일체성·정통성을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과 여야 합의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 통일에 회의적이고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

□ 민간 중심의 통일담론 속의 구조 형성 및 남북교류기반 강화

-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통일담론의 속의 구조 활성화 및 통일정책 공론의 장 강화
- 비정부 채널을 통한 남북 간 신뢰 형성과 지자체 주도의 교류협력을 위한 ‘풀뿌리 차원’의 협력 공감대 형성

□ 남북 합의 선제적 이행 및 특수관계 재부각으로 적대감 완화

- 9·19 군사합의 복원과 과거 남북 합의 및 선언의 선제적 준수·이행을 통해 ‘흡수통일론’을 불식하고 상호 신뢰 강화
-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핫라인 복구 및 남북의 특수관계를 재부각하여 적대감 완화 노력

□ 안보와 평화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

- 북핵 억제력 강화와 대화·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 안보와 평화가 상호배타적인 목표가 아닌 국익실현을 위한 세부적 실천과제라는 점을 강조

□ 실용 중심의 4강 외교 및 통일외교 공간 확대

-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와 함께 한중, 한러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일 간 공동이익 기반 협력 지속
-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외교를 통해 균형자이자 창의적 중재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I

건의 배경

□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유연하고 실용적인 통일·대북 전략 필요

- 대북 압박 또는 대화 촉진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
 -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기보다 구조적 원인인 정책 일관성 결여, 국제 환경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한 통일·대북 전략 필요
-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초당적 통일·대북정책 틀을 마련하여, 남북합의 이행과 교류협력의 지속성 확보 시급
 - 특정 정권의 통일·대북정책이란 당파적 틀을 넘어 미래세대의 여론을 반영한 중장기 통일비전 요구

□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감 완화 및 대국민 공감대 요구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한 억제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복원하여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
 - 군 통신선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교류 재개 기반 마련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로 통일·북한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국민기대감 감소
 - 국내 정치의 양극화 속에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견 심화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약화

□ 남북관계 단절 장기화와 북한의 대남 위협 지속

-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핵 고도화 및 무력 도발을 지속하며 대화와 접촉 거부
-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적 불안감과 핵무기 보유 명분이 가중
 -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무기 개발과 공세적 핵전략에 더불어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 가속

□ 한반도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저하와 주변국 협력 확보에 제약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한반도 문제는 양국 외교 전략에서 후순위로 배치
 -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과 인태전략의 하위변수에 위치
 - 미국은 한미 간 안보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한 경제적 판단을 우선시하며 방위예산 증액과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집중
- 격화하는 미중경쟁과 미국 우선주의에 조응해 많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 선택
 -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가 가져올 변화와 관련해 주변국 모두가 공유하는 실익의 교집합 도출에 어려움 가중
-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 국제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이슈는 상대적으로 관심 저하

II 정책 건의

[대내적 차원]

□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

- 통일·대북정책의 일체성·정통성을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과 여야 합의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 통일에 회의적이고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방안에 반영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병행

□ 지역사회 중심의 통일사업 추진 및 담론 속의 구조 형성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 참여형 통일 사업 추진
 - 지자체와 민주평통 지역회의·협의회 간 연결을 강화하고, 통일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 우선 부여
- 민주평통 지역 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문화·환경·보건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중심으로 통일담론 속의 구조 활성화
 - 속의 과정에서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분열과 정쟁화를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통일 공론장의 지속적 운영에 주력

□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 기반 강화

- 정부 간 공식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시민단체 또는 1.5트랙 대화나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 등 비정부 채널의 협력으로 남북 간 신뢰 형성
- 지자체 주도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하는데 유리해 북한의 수요에도 부합
 - 교류 의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후·환경·재해 대응 분야로 넓히고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남북관계 차원]

□ 대화 채널 복구 및 적대감 완화 노력

-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핫라인 우선 복구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후속 조치, 대북 전단, 무인기, 오물 풍선, 남북한 경계 재설정 등 갈등 관리를 위해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한 대응과 군사 대화 채널 복원은 반드시 필요
-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적 접촉 추진
 -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공식·비공식 접촉을 시도, 남북대화 창구 확보 노력 지속
- 남북은 통일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재부각하여 상호 적대감 완화와 화해,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

□ 기존의 합의사항 선제적 이행과 신뢰 구축

- ‘9·19 군사합의’ 복원 및 과거 남북 간 합의의 선제적 이행을 통해 ‘흡수 통일론’을 불식시키고 상호 간 신뢰 문화 제도화
 -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부터 ‘평양공동선언’(2018년)까지 축적된 합의들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쌍방이 핵심 조항을 재확인하고 실천 노력
 -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및 교류 협력 조항을 준수하고 위반 시 효과적인 공동대응 프로세스도 협의

□ 안보와 평화를 병행하는 전략 추진

- 북핵 억제력 강화와 대화·협력을 선순환 구조로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인도적 협력을 패키지로 묶어 실행하고,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확보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구체화 등의 군사적 억제책을 강화하는 한편 군 통신선·핫라인 완전 복구, 군비통제 실무협의체 재가동 등 신뢰 구축 조치도 병행
- 안보와 평화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익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실천과제라는 점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대외적 차원]

□ 유연한 실용외교로 4강 외교 강화

-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한러 협력을 제로섬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로 인식하는 기조 하에 실용외교 극대화
 -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북핵 대응력을 유지하되, 중국·러시아와는 긴장 관리 및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 유도
- ※ 한미동맹 관련,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한 논의에 과도한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방산협력, AI·반도체·우주 협력 등에 중점
-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상호 이익이 되는 관심사를 발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대북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 (민주평통 국민 통일여론조사, 2025.7.)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8.9%)
-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35.9%)
-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10.6%)
-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6%)

□ 미중 전략경쟁과 통일외교 공간 확대

- 다층적 다자 협력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균형자이자 창의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방역 협력 등 비전통적 안보 의제에서 남북 및 주변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협력 프로젝트도 개발
-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견국을 비롯하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창출 

북한인권 정책 및 탈북민 지원 방안

인권 · 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요 약

□ 인류보편 가치 실현을 위한 통합적·균형적 접근 추진

-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적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일관된 원칙 견지
- 국제인권체계의 핵심인 자유권과 사회권에 기반하여 통합적인 인권개선 노력 지속 전개

□ 다자무대를 기반으로 건설적 비판과 개선 방안 모색

- 북한에 대한 건설적 비판 및 책임규명 노력은 UPR 등 국제무대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
-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 실질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접근 및 민관의 역할 구체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되, 양자적·다자적 접근과 공세적·협력적 접근에 대한 적절한 조화 검토
- 민과 관, 정부 부처 간, 국내외 NGO간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여 효율성 제고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지속

-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권 침해와 가해실태에 대한 DB 구축 지속
- 정부 주도의 DB 구축·관리와 더불어,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통일연구원, NKDB 등 주요 기관과의 DB 공동 활용 방안 검토

□ 재외 탈북민 보호 강화 및 탈북민 정착지원 내실화

- 중국 내 탈북민 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러 인적 교류 확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러시아 내 탈북민 보호 대책을 마련
-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과 북한 인권 개선의 레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의 내실화 추진

I

건의 배경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관심 약화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 및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이전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견지
 -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안에 따라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에 대해 압박과 양보를 동시에 요구
-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 등 추상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며, UN 인권이사회 재탈퇴

□ 심각한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사회의 노력

-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
- 중국과의 교류가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러우 전쟁에 적극 파병하며 관련 인권 문제 부각
-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북한인권 상황 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대로 2015년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개소, 북한인권 감독 및 기록 시행

- 미국, 일본, EU, 영국 등은 북한인권 관련 국내법 제정과 제재 레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인적 제재 부과

❖ 해외 주요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제정 현황

- 미국: 「북한인권법(2004년)」, 「대북제재강화법(2016년)」, 「적성국제재법(2017년)」
- 영국: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년)」, 「글로벌인권제재규정(2020년)」
- EU(유럽연합): 「글로벌인권제재레짐(2020년)」
- 일본: 「북한인권법(2006년)」

□ 원칙 있는 실용적 북한인권 정책방향 정립 중요

- 국익중심 실용외교, 글로벌 선도국가, 호혜적 평화통일정책이 제대로 이행 되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 정립이 중요
 - 국제사회의 개선 노력에 호응하는 원칙과 기본입장 하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보다 실용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
- 한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처 간 역할,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제 등 보다 세분화된 협업과 노력도 요구

□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정책의 연계 필요성

- 북한인권 개선과 남한 사회 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확대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 요구
- 정착을 저해하는 다양한 층위의 요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정착지원 규모와 제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정착 지원망 체계화 필요
- 비수도권 거주 탈북민과 미혼모 탈북민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지 노력 지속

II 정책 건의

□ 인류보편 가치 실현을 위한 통합적·균형적 접근

- 북한인권 문제는 특정국가의 사안이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 견지
 - 북한인권 문제를 비핵화 문제와 분리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칙 중심의 접근 필요
-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범주인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기반하여 통합적인 개선 노력 전개
 - 두 범주의 인권은 상호연관성, 상호강화성으로 긴밀히 연결된 점에서 자유권 문제(수용소 등)와 사회권 문제(식량권 등)를 균형적으로 개선
- 2014년 유엔 COI*보고서의 권고를 토대로 개선 사항의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COI(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 후 설치된 위원회로 2014년 2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기반하여 형사처벌과 책임을 촉구한 보고서 발간

- 자유권 분야에서는 북한 당국의 일차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행 부족에 대한 공세적 접근과 동시에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s),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등 다양한 관여 방식을 지속 추진

*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과 정책으로 규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을 구축하여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 전략 중 하나

- 사회권 관련, 북한의 1차적 책임 이행이 불가능할 시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의 책임·의무를 강조하는 적절한 비판과 지적(naming&shaming) 필요

□ 다자무대를 기반으로 건설적 비판 지속과 개선 방안 모색

- 북한에 대한 건설적 비판 및 책임규명 노력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할 필요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조약감시기구의 관련 절차에서 자유권 및 사회권 모두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음을 강조
 - ※ 북한은 대북제재 등 외부요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제한된 자원을 핵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유권은 물론 일반 주민의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기회를 활용해 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전달
 - 미국, EU 등이 시행 중인 ‘북한인권 제재 레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경우, 북한 고위급 인사와 해외 공관에 체류 중인 보위부원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

-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등 북한이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는 국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력가능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접근 시도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유엔인권이사회 주도로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 6개월마다 자국의 인권의무와 약속 이행 현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약속하는 제도

- 대북제재 하에서도 취약계층 및 이재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
-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해 개발협력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대화 병행

※ 북한은 제3차 UPR에서 자유권 관련 권고를 과거보다 많이 수용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유엔, EU 등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

□ 실질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접근 및 민관의 역할 구체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론 모색
- 인권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유지하고, 필요시 인권을 직접 거론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해당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자 차원의 양자적·다자적 접근과 정책적 차원의 공세적·협력적 접근 사이의 적절한 조화 필요
- 동시에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민관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업 필요

- 정부 내에서는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부처 간 협업 및 역할 구체화
- 국제 인권 NGO인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전문성과 활동을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활용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지속

- 북한인권 개선은 민족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인식 아래 인권침해와 가해실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지속
 - 이는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통일 이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화해와 용서를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
-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설립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 활성화 도모
 - 정부의 자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는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기록센터(NKDB)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유기적 연계로 자료의 정확성·활용도 제고
 - ※ 형사처벌을 위한 기록 수집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향후 피해자 구제, 진실 규명, 화해 등을 위한 비사법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인식 하에 면밀히 준비
-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인권법」이 가진 북한인권 DB 구축체계 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자료 수집·분석 체계를 마련

□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재외 탈북민 보호 강화

- 북한에 대한 압박 및 관여와 함께, 북한 당국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내부에서 견인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
 - 북한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안 검토
 - 전달 콘텐츠 역시 직접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한 간접적 접근을 고려
 - ※ 예를 들어 남녀 간 사랑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 속에 일상 속 인권 침해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메시지를 녹여냄으로써 간접 체험 가능
- 중국 내 탈북민 보호 노력과 함께 북러 간 인적 교류 확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 내 탈북민 보호 방안 마련
 - 유엔난민기구(UNHCR) 모스크바 사무소 등을 통한 보호 체계를 활용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 또한, 우리 관할 영역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주민의 경우 자유로운 귀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인권대사 임명 검토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구성
 - 「북한인권법」에 직·간접적으로 규정된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관련 구체적 전략 재검토 필요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안정적 운영 보장 및 차기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검토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활동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전시 및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인권 개선의 레버리지 차원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내실화

-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은 사회복지를 넘어 북한 인권 개선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지원 정책 지속적으로 강화
 - 탈북민 상당수가 북한 내 친인척에 송금 등 연락을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와 남한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정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계기로 정착지원의 질적 내실화 도모
- 탈북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일정수준 구축되었으나, 비수도권 거주 탈북민과 미혼모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는 여전히 과제
 - 지자체가 주도 하에 관할 지역의 빈집을 보수·공급함으로써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기반 마련
 - 인구감소 위기 농어촌 지역과 연계하여 ‘일자리·주거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탈북민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관련 혜택 홍보
 -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탈북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자녀 돌봄 등 핀셋지원 프로그램 상시 운영

-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탈북민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 탈북민이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일부 인식은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 남북하나재단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결과, 가족, 친척과 교류가 없는 탈북민은 44%,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탈북민은 25%로 나타나 상당수가 사회적·정서적 고립에 직면
 - 자살충동을 경험한 탈북민 비율은 2024년 기준 12.8%로 2022년 11.9%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국민 4.8%에 비해 높은 수치
-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 형성은 탈북민 정착의 핵심요소로 지역사회 기반의 인식 개선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운영 필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요약

□ 핵억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한미동맹의 발전

- 전시 작전권 전환을 통해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 주도 방어체계 확립 노력
-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작전 계획에 준하는 「북핵 대응계획」 수립 검토

□ 중국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 구상 강화

- 미중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국이 수용 가능한 통일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다자협약체 추진
- 한중 간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평화·통일 한국 비전」을 준비

□ 실용적 한일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

- 관세 협상, 한일 2+2 외교·국방 협의체 구성 등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일본과 자주적 안보 협력 가능성 모색
-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 상징적 계기에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성과 축적

□ 글로벌 사우스와 전략적 연대 강화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의 '기여외교' 모델을 확산하여 글로벌 사우스의 북핵 대응 참여를 유도
-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사우스에서의 이스트-웨스트 간 협력 창출' 이니셔티브를 제안, 한국의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I

건의 배경

□ 국제질서 변화와 남북관계 도전 요인 증대

- 미중 전략경쟁 심화, 지역 분쟁의 증대 속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저하
 - 미-중, 미-러, 나토-러시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국제정치 구도의 재편이 진행 중
 - 글로벌 사우스의 다자주의 및 자율성 추구로 인해 미중 블록 외 다중연합 구도 등장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며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접촉 하거나 적대관계 하에서 핵 군축을 추진할 가능성
 -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외교적으로 신냉전 진영 구축 및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불확실성 심화

-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의 핵심을 중국 견제로 두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위협 대비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 트럼프의 사적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화된 국제체제'(personalistic international system)와 대통령 중심주의 외교의 불확실성 내포

□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 상승

- 중국은 전 정부의 대미 일변도 외교노선과의 차별화를 기대하며 한국을 압박보다 회유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유화적으로 접근
-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양자관계 및 동아시아전략 구도라는 큰 틀을 우선 검토
 - 한국은 미중관계가 양호할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유리

□ 대일 외교의 실용적 재구성 필요

-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며 전략적 협력 강조
 - 이시바 정권에 대한 20%대의 낮은 지지율과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인한 일본 국내 정치 변수를 고려할 필요
- 한일 방위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양국 간 신뢰 회복에 대한 여론이 증대
 -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 여론조사(2025.6.13.~15.)에서 한일 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긍정적
- 강제동원, 위안부 등 역사문제는 여전히 갈등 요소로 상존하고 있지만,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등 자원·해양 협력 수요는 증대

□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전략적 기회 포착 필요

-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 내 중국·러시아의 정책에 편승하여 진영 구축을 지정학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 구사

○ 글로벌 사우스는 다중 연합(multi-alignment)과 국제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비판적

- 강대국 간 경쟁을 자국의 이익에 활용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자국 입장에 반영

※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러시아제재 표결에서 기권

II 정책 건의

□ 핵억제 전략 고도화를 통한 한미동맹 발전

-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대북정책 핵심 목표로 유지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공식문건·발언에 명시되도록 협의 및 공감대 확산
-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과 미국의 인태전략을 고려하여 한미 간 분담 조정과 동맹 공약 유지
 -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갈등에 대비해 한국의 입장 사전 정리 및 미국과 조율
- 전시 작전권 전환, 작계 5022* 재작성, 연합사 재구축 추진 등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 주도 방어체계 확립

* 작계 5022: 북핵 공격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이버전을 포함하여 핵 지휘체계 교란을 목적으로 수립된 한미연합 작전계획

-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지속하고, 최종적으로 작전계획에 준하는 「북핵 대응계획」을 수립·추진

*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2024년 2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 지침

□ 중국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 구상 강화

- 미중관계를 고려하여 양국이 수용 가능한 통일전략을 구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약체 추진
- 중국에 「평화·통일 한국비전(Vision for Peace & Unified Korea)」을 제시하여 중국의 역할 확대를 설득
 - 한반도 비핵화-평화-안정의 목표를 공유하여 한중간 이해가 일치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
-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내 지식·언론·문화예술인 등 민간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강화
 -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는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하고 증진하자”고 합의한 한·중 정상통화(6.10.)의 내용을 실천하는 길이며,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길
 - 민주평통과 국내 학술단체 및 학회 등을 중심으로 학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식인층에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실용적 한일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

- 대미협력과 함께 한일 2+2 외교·국방 협의체 구성 등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인 한·일 안보 협력 가능성 모색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연속성 속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위기관리, 재난대응 등의 의제에서 협력 확대

- 역사 및 영토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대륙붕 공동개발 등 실질 이익이 결부된 분야는 실용적으로 접근
 -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 상징적 계기를 활용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정상 간 신뢰 구축과 성과 축적
 -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추진을 신중히 검토
- ※ 일본 국빈 방문은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며 한일 정상회담 공동문서 발표는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후쿠다 총리 이후 중단

□ 글로벌 사우스와 전략적 연대 강화

-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기여외교 (contributive diplomacy)’ 모델을 확산하여 글로벌 사우스의 북핵 대응 기여 유도
 - 개발협력, 기술이전,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국을 공동 발전의 동반자로 각인시키고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대북 레버리지 확보
 -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해 전통적 기여외교 및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북한의 참여 유도
-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이스트-웨스트 간 협력 창출 (The Global South’s Potential to Harmonize East-West Relations)’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다자 협의체에서 연대 확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브릭스플러스(BRICS+)** 등을 활용하여 정책 연계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

** 브릭스플러스(BRICS+): 2023년 8월 기존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6개국(에티오피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 에미리트, 아르헨티나)을 추가해 11개국으로 확대

- ‘정직한 중재자 (honest broker)’로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아프리카·동남아 국가들과 북한에 대한 견인 및 견제 지속 

남북대화채널 복원과 평화경제 여건 조성 방안

경제 · 과학분과위원회

요약

□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긴장 완화 조치 추진

- 대남·대북 방송 중단, 전단 및 오물풍선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완화
- 유엔총회, APEC 등 외교 계기를 활용해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 발신

□ 비정치적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재개

- 임진강 수해 공동대응, 북한 어민 송환 등 인도적 협력을 실현 가능한 과제로 설정하여 대화의 출발점 마련
-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 태권도 시범단 교류 등 중단된 사회·문화 사업을 복원해 신뢰 기반 구축

□ 남북 간 소통 채널 정상화와 합의 이행 기반 강화

- 군 통신선과 연락망 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소통 채널 회복 및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 제3국 및 국제기구 활용,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통해 기존 합의의 지속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

□ 제도 정비를 통한 평화경제 기반 마련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 정비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수용 가능한 관광협력 우선 제안
-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경제주체의 자율성 확대 등 실용주의 기반의 정경분리 정착

□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지역 연계 협력

-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특화산업 육성과 세제·재정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
- 남북 시·군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의존적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교류로 확장

I

건의 배경

□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대화채널 복원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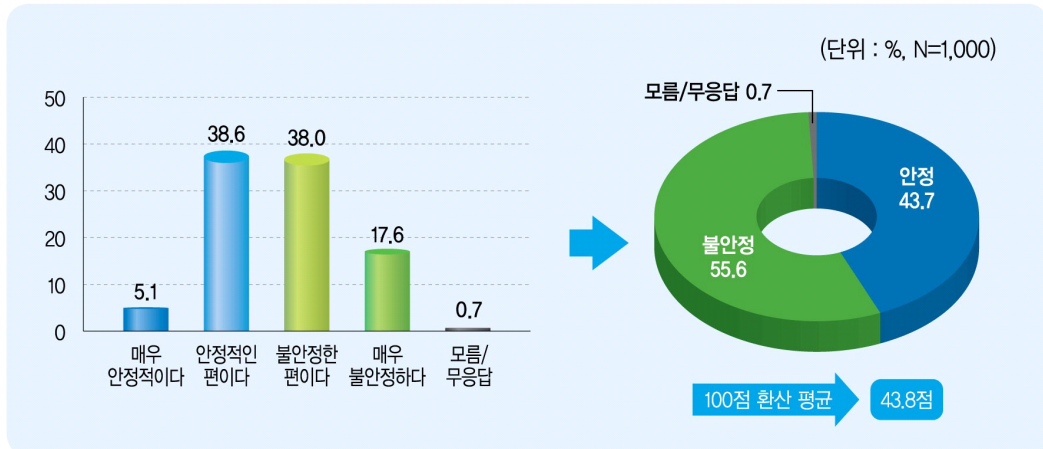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북러관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고조
- 미국 우선주의와 북미대화 선호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경쟁 속에서도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위기와 기회가 병존할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 대비 요구
- 대화채널 단절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며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상황
 - 군 통신선 단절,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전단살포 등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 불안과 지역 위기의식을 심화

□ 국내 여론 변화와 남북 긴장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지속
 - 우리나라 국민 중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6%로, '안정' 응답보다 높아, 국민 다수는 안보 불안을 체감

☞ 안보 상황 인식 (민주평통 국민 통일여론조사, 2025.7.)

불안정 55.6% > 안정 43.7%



- 남북의 확성기 중단 조치 등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
 - 지난 6월 남북이 각각 대북확성기,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은 긴장 완화와 상호 대응의 출발점으로 작용했으며, 후속 조치를 통한 대화채널 복원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

□ 지속 가능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분단 구조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가 남북 경제에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정치·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가 위축되며, 남북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난항
- 평화경제는 남북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경제주체 간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

-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도 평화경제 여건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
 - 국민의 34.8%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응답했으며, 이는 남북 간 교류 기반 구축과 접경지역 중심의 경제협력 전략이 국민적 요구와 일치함을 시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우선 추진과제 (민주평통 국민 통일여론조사, 2025.7.)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34.8%)
-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23.4%)
-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17.7%)
-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협력 모색(13.0%)

II 정책 건의

□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환경 조성

-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 필요
 - 대남·대북 방송의 동시 중단,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통해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완화
 - 군 통신선·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조치(유엔사를 통한 소통 병행) 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 추진
- 외교 일정 및 국제무대를 활용한 접촉 계기 마련
 -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 메시지, 유엔총회, APEC 회의 등 국제무대를 활용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
- 인도적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개를 통한 신뢰 형성
 - 한국 체류 북한 어민의 인도적 송환, 임진강 수해 방지 협력 등 긴급하고 실현가능한 인도적 협력 과제 중심으로 논의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류 등 중단된 남북 사회문화 협력 사업의 재개
- 비정치적 협력과제를 통해 대화 여건 조성
 - 서해 평화해양공원 조성, 공동어로, 해양오염 방지 등 남북 상호 이익이 확실한 비정치적 협력 의제를 우선 제안

- 북한이 과거 참여한 NOWPAP(동북아시아해역환경보전실천계획), YSLME(황해광역생태프로그램) 등 기존 국제협력틀을 활용해 북한의 실질적 참여 유도
- 국제 협력 기반의 협력 구조 제도화 및 외교 환경 조성
 - 국제기구 주도의 다자협력 체계를 통해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미·중·일·러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남북-북미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남북 소통채널 정상화와 합의이행 기반 강화

- 단절된 채널 복원을 위한 실무적 조치 추진
 - 남북 간 통신선, 연락망 등 기존 소통 채널의 단계적 복원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회복하고 실무 대화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
 - 군사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해 9·19 군사합의의 실질적 이행이 선결 과제
- 국제무대 및 비정치 채널을 활용한 간접적 접촉
 - 국제무대를 계기로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형식의 접촉 가능성을 모색 하고 남북 모두 정치적 부담이 낮은 환경 조성
- 대남 조직 해체 이후 협상 구조 공백대응
 - 기존 대남 창구 해체로 인해 협상 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여 국제기구 또는 제3국의 중립 채널 등을 활용한 소통 방식 모색

- 공식채널 복원 전까지는 일관된 정부 메시지를 유지하며 북한의 반응과 변화를 견인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복원 위한 대화 모색과 사업 지원
 - 중단된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접촉 확대
 - 인도적 사업, 의료보건, 산림녹화, 개별 관광 등 그동안 추진해온 민간기업 및 단체의 대북교류사업 재개 지원

□ 제도 정비를 통한 평화경제 기반 마련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 남북 합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주요 남북 합의를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며, 합의의 정지·재개·재협상을 위한 남북 공동 관리기구 설치
-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실용주의적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교류재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협력 등 북한이 수용 가능한 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
 - 정부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북한 관광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경우, 경제적 실익 확보가 필요한 북한이 소통채널 복원에 응할 가능성 존재

※ 북한이 2025년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열고 7월 1일부터 관광을 개시하였으나, 현재 내국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아직 과제

□ 실용주의 관점의 정경분리와 역할 분담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화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에서 정·경의 역할 분담 규범을 정착
 - 정부는 평화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남북 협상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남북의 경제주체는 경제교류와 협력에 집중
 - 남북 간 경제교류에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경제주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자기 완결적 접촉신고제 등 교류·협력 절차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주체의 계약 체결 등 경제협력 사업에서 권한 확대
 - 디지털 기반 교류환경 조성
 - 남과 북, 해외의 경제주체 간 인적·지적 교류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화상회의, 사회문화 교류, 게임, 전자상거래 등을 지원
- ※ 현재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활용

□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지역 연계 협력 강화

-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조성을 강조한 바, 평화경제특구의 조기 개발 필요
 -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세제·인허가·재정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평화경제특구

- 「평화경제특구법」(‘23.6.13.)에 따라 남북 간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
- 대상 지역
 - DMZ 남방한계선, NLL 인접 시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5개 시·군)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 권역별 평화경제 구상
 - 서부권: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분야 첨단산업단지 조성
 - 중부권: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조성
 - 동부권: 관광 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조성

○ 북한의 지방발전전략(지방발전20×10정책)과 남한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 연계

- 개성공단(서부), 세포지구(중부), 금강산·원산갈마관광지구(동부) 등 북한 개발 거점과 평화경제 특구 간 연계 추진
- 산업·자원·지형 등 유사성을 바탕으로 남북 시·군간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린 협력 프로젝트 발굴

※ 인천-남포 간 해상물류·항만 현대화·수산 협력 등 실질 협력 사업 추진 가능

- 동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지역 간 상호의존성과 공동 이익 구조가 형성되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다자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참여를 통한 기반 조성

○ 남-북-해외의 다자경제협력체계 구축

- 남한의 평화경제특구,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그리고 해외 경제특구 간 다국적 협력체계 모색
- 북한에서 도시 개발, 정보통신망 개선, 농업 현대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남북, 해외의 다자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 한반도 평화경제에서 제3국 및 국제기구의 참여 보장

- 평화경제특구 개발,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 공동경제협력 사업에서 국제기구 및 단체, 그리고 제3국 경제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및 법률 반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법률에서 제3국 경제주체의 지원 방안 추가

○ 남북 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지식공유 기반 마련

-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AI, 금융, 스마트팜(Smart farm) 등 지식 공유사업(KSP)을 활용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모색
- 남, 북 그리고 해외의 경제주체가 함께 환경·기후 분야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

교류 · 협력분과위원회

요약

□ 남북 상호 이익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협력의제 설정

-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넘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협력의제 필요
- 남북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전력 분야를 핵심 협력 의제로 선정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도모

□ 단계적인 에너지 협력 로드맵 수립

- 북핵 진전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력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완전한 평화체제 이후 남북 전력망을 통합하는 장기 로드맵 마련
-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병원, 보건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 소규모 협력부터 추진

□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통합 전력체계 구축

- 남북 전력망 연결 및 전력 공유를 통해 한반도 전력 안정성을 제고하고 긴밀히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켜 분쟁 억제
- 정부의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망 구축 과제의 거점인 서해·남해·동해축을 북한으로 연장해 인접 국가와의 에너지 교류 기반으로 확장

□ AI를 활용한 남북 전력 공동운영 체계 운영

- 전력수요 예측, 송전 최적경로 산출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운영 체계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운영
- 한반도 전력 AI 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전수,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 기술 교류 기반 조성

□ 분권화를 통한 남북협력의 지속성 확보

-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남북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권한을 부여해 제도적인 지속성 확보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단위 인천-개성 태양광 마을, 강원도 고성-금강산 풍력발전 사업 등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I

건의 배경

□ 장기 정체 상태인 남북 교류협력

-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보건·의료·산림·농업 등 분야에서 인도적 협력이 시도되었으나 대북제재로 인한 지원물자 및 기술 이전 제약,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상태 지속
 - 감염병 대응 관련 협력은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코로나19 시기 백신·치료제의 대북지원 무산
 - 산림분야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50톤 지원이 성사됐으나 양묘장 현대화, 추가 공동산림사업 등은 진전되지 못한 상황
- 남북 경제협력 역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중단
 - 2016년 개성공단 사업마저 폐쇄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은 10년 동안 정체 상태 지속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필요성

-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은 상호 신뢰 형성 및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

-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을 넘어 남북 상호이익 창출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 북한에 대한 일방적·단기적 지원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협력 방안의 모색 필요

□ 남북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 의제 설정 시급

- 남북 상호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남북 상호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협력 의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지속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
- 우리 정부는 글로벌친환경규제(RE100) 대응과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송전 인프라 구축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과제로 선정

* 에너지 고속도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지(서해안 등)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초고압 전력 송전 인프라(HVDC) 사업으로 2030년 서해권 착공, 2040년까지 전국망(U자형) 완성 목표

- 북한도 만성적 전력난과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전력공급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확대 목표 발표

❖ 남북의 전력 격차

- 북한의 에너지 빈곤과 낙후된 전력 인프라는 산업·민생 전반의 발전을 제약하며 남북 간 에너지 격차는 갈수록 확대
 - 2021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약 8.2GW로 남한(134GW)의 6.1%, 연간 발전량도 255억 kWh로 남한(5,768억 kWh)의 4.4%에 불과
 - 발전량 중 약 63%는 수력, 37%는 석탄 등 화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이용률은 약 30~40% 수준
- 남북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전력분야를 중점 협력 의제로 검토

II 정책 건의

□ 단계적인 에너지 협력 로드맵 수립

- 북핵문제 진전 상황과 연계해 단계별로 전력 협력을 추진하고 완전한 평화 체제 이후 남북 전력망을 통합하는 로드맵 마련
 - 단기적으로는 대북제재 여건 상 제약이 존재해 단계적 신뢰 구축과 사전 준비에 초점
 - 인도주의, 기후 변화 대응 명분으로 국경 인접 지역의 병원, 보건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소규모 협력부터 접근
- 전력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부각해 인권개선 차원의 대북 전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유엔개발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다자기구를 매개로 전력망 연계 사업 추진

□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통합 전력망 구축

- 북한의 전력망은 노후화되고 지역 간 송전망이 취약하여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잉여 발전량이 일부 존재
 - 남북이 전력 공유 시 전력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능
 - 긴밀히 연결된 전력 공동체는 갈등 발생 시 상호 피해가 커 분쟁을 억제하는 효과

-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의 서해·남해·동해 축을 북한으로 확장해 인접 국가와의 에너지 교류 기반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 서해 거점은 서해안 해저연계망을 평양과 연결해 대용량 전력 교류의 중심축으로 활용
 - 남해 거점은 부산·경남 지역과 북한의 서해 남단지역(개성·해주 등)을 연결해 중국과의 전력 거래 허브로 개발
 - 동해 거점은 강원 동해안과 원산·금강산 지역을 연결하여 북한 동부 지역 및 러시아 전력망과 연계
- 동북아 초국경 전력망이 실현되면 몽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러시아의 수력 등 공유로 역내 초저가 청정에너지 시대 개척 가능
 - 동북아 지역의 전력 수요는 세계 전력 수요의 1/3을 차지하며, 2050년까지 두 배로 성장 전망
 -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와 북한을 국제전력 협약 참여를 유도한 다는 점에서도 의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에너지 접근성 향상, 기후행동 이행, 동북아 다자협력에 기여한다는 모범사례 정립 가능

□ AI 기반 남북 공동 전력망 운영 시스템 구축

- 남북 공동 스마트 전력망 운영센터를 설립해 AI 기반의 전력 수요 예측, 송전 최적경로 산출 등 지능형 운영 체계 마련
 - AI 기반 남북 공동 전력망 운영은 AI 강국 전략의 목표 달성(AI 도입률 70% 이상)에도 기여

- 남북 전력망 센터를 기술 전수, 인력 양성, 전력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 지속가능한 기술 교류 기반으로 활용
 - 남북 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노후 전력망 개선, 비동기 연계, AI 관제 등)을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에 맞춤형 솔루션으로 적용
 -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수익 공유 구조 형성

□ 분권화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권한을 부여해 정권변화와 무관하게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추가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관계 발전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앙정부 간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연한 남북 전력망 협력 모델 구축
- 정부는 대북제재 면제와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과 민간투자를 활용해 남북교류 추진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천-개성 태양광 마을, 강원도 고성-금강산 풍력발전 사업 등 지역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란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할 수 있는 자립형 전력 시스템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종교 분야의 역할

종교 · 민족화합분과위원회

요약

□ 민족·종교 분야는 향후 교류 복원의 마중물 역할

- 대화채널 단절과 교류의 중단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경로를 차단하며, 분단의 고착화를 심화
- 종교와 민족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복원 가능성이 높은 비정치 교류채널 역할 담당

□ 접경지역 우선 교류와 다층 협력 체계 구축

- 접경지역 홍수 대응, 생태조사, 문화유산 정보 공유 등 비정치 분야 협력 우선 추진
- 중앙-지자체-민간-국제기구 간 협력을 연계하고, 조정 및 국민 참여 구조를 통해 협력 강화

□ 민족 정체성 회복과 문화유산 교류 강화

- 남북 공동 민족유산 디지털 복원·기록화와 국제문화기구 협력 추진
- 개천절·광복절 등을 '평화를 위한 민족화합의 날'로 공동 제정·운영하여 상징적 교류 확대

□ 종교계 중심의 평화·인도 협력 확대

- 바티칸·WCC·국제종교연대 및 유엔·적십자와 연계한 다자 협력
- 종단별 전문성 기반 식량·보건·교육 분야 역할 분담형 인도지원 체계 재정비

□ 청년세대의 민족·종교 기반 교류와 참여 확대

- 청년 아카데미, 뿌리찾기, 캠프 등 정체성 회복 프로그램과 웹툰·SNS 등 청년 대상 실천형 콘텐츠 확대
- DMZ 탐방, 남북 전통축제, 종교 포럼 등을 실천형 비공식 채널로 활용하여 민간외교의 여지를 확보

I

건의 배경

□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과 실질적 소통의 단절

- 남북관계는 대화 재개 없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신뢰회복의 단초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
 - 9·19 군사합의 파기,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으로 남북 간 공식 대화채널이 사실상 소멸
 - 코로나19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고, 민간·지자체 교류도 정부 승인체계 경색으로 전면 차단
- 남북 간 접촉 경로가 사실상 모두 폐쇄되며, 교류 협력의 기반 자체가 약화
 - 북한의 대남기구 해체 등으로 민간단체와의 접촉 가능성도 현저히 축소되어 실질적 접점 부재가 관계 복원 노력의 큰 제약 요소로 작용

□ 정치·군사 중심 접근의 한계와 비정치 교류의 필요성

- 기존 정치·군사 중심의 소통 정책은 반복적 긴장과 단절로 인해 구조적 한계를 노정
 -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에 장애가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
- 종교와 민족은 정치적 민감성이 낮아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복원 가능성이 높은 비정치 교류 채널 역할

- 분단 장기화로 언어·문화·생활양식의 이질화가 누적되며 민족동질성이 약화되어 전통적 민족 자산에 대한 공동 인식이 점차 희미
- 문화적 동질성 회복 없이는 통일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

□ 민족·종교 분야 교류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은 상호 신뢰를 축적해 온 민간교류 사례로, 비정치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교류 복원의 마중물로 활용 가능
- 종교·민족 분야는 축적된 경험과 공감 자원을 바탕으로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
- 국제행사를 통한 종교계의 접촉 여건 조성에 기여 가능
-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시 교황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의미 있는 종교행사 계기 활용
- 종단 간 접촉 시도와 국제 종교협력망 활용을 통한 우회적 소통 가능성도 주목

□ 대화 채널 단절과 교류 중단에 영향

- 대화채널 단절과 교류의 중단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경로를 차단하며, 분단의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신앙, 문화유산, 언어, 관습 등 전통적 민족 자산에 대한 공동 인식의 약화는 통일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점 우려

- 문화적 동질성 회복은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 요건
 - 민족정체성 회복 없는 이질성의 누적은 향후 통일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II 정책 건의

□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과 제도 정비

-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남북민간교류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정부·지자체·종교계·민간단체가 공동참여하는 공공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민주평통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 사업에 정부가 법·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및 시행령 보완을 통해 대북 접촉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제로 점진적 전환
- 남북협력기금을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민족 정체성 회복 등 다양한 목적의 교류 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용도 규정 확대
 - 종교·민족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를 위해 기금 목적과 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 성격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접경지역 우선 교류와 다층적 협치 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민간단체-국제기구 간 협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다층 협치(multi-level governance)’ 체계 설계
 - 국내 전문가,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성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접경지역에서 정치·군사 의제를 배제한 비정치 분야 교류를 먼저 재개해 신뢰 회복의 기초를 마련
 - 접경지역 홍수 피해 관리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생태조사, 문화유산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긴장 완화
 - 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주민 간 정서적 가치 중심의 교류를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목표 설정

□ 민족 정체성 회복과 문화유산 교류 강화

- 남북 공동 민족유산 디지털 복원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의 연속성을 회복
 - 고구려·백제 유적지, 개성 만월대, 묘향산·칠보산 사찰 등 대표 문화유산의 문헌·유물·구술자료를 수집하고 3D 복원 콘텐츠 제작
 - ‘남북민족유산 디지털 박물관’ 공동 플랫폼을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청년층의 역사·문화 이해도를 제고
- 유네스코·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국제문화기구와 협력해 제재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모델 마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 등을 연계 추진하여 국제적 지지 확보
- 남북이 개천절·광복절 등 역사적 기념일을 ‘평화를 위한 민족화합의 날’로 공동 제정하고 연례 기념행사로 운영

- 남북 주민·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행사로 발전시키고 문화·종교·체육 등 다양한 교류를 결합해 민족 공동체 인식 확산

□ 종교계 중심의 평화·인도 협력 확대

- 종단별 전문성과 조직 기반을 활용하여 식량·보건·교육 분야에서 역할 분담형 인도지원 체계를 재정비
 - 천주교(의료·보건), 불교(문화유산 복원), 개신교(식량·교육 지원) 등 각 종단의 강점을 살려 분야별 역할을 분담
- 바티칸, WCC, 국제종교연대 등과 협력해 신뢰 기반을 확보하고, 유엔·적십자 등과 연계한 다자 인도지원 플랫폼을 구축
 -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계기 교황 방북 가능성에 대비해 종단 간 연락 채널 복원과 실무 접촉 기반 마련
- DMZ 종교유산 탐방로 조성과 평화순례길 운영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 확대
 - 도라산·철원·고성 구간을 잇는 순례길 조성, 묘향산 보현사·개성 성당·금강산 유적 등 신앙성지를 활용한 공동순례 추진

□ 청년세대의 민족·종교 기반 교류와 참여 확대

- 종교계와 대학이 협력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 간·남북 간 공감대 형성하고 장기적 교류 인프라 마련
 - 통일청년아카데미, 범종교 청년평화아카데미 등을 정례 운영하며 탈북 청년과 남한 청년이 함께하는 전통문화·신앙 체험, 역사탐방, 공동 프로젝트 등을 확대

-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서 교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의 생활 기반 마련
 - DMZ·신앙유적 공동순례, 민족문화체험 캠프, 이산가족 후손 뿌리찾기, 민족 전통축제 재현 등 지속 추진하여 상호 이해와 유대 강화
- 청년 친화형 매체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통일·민족정체성 공감대를 생활 속에서 확산
 - 웹툰·유튜브·SNS 챌린지,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등 청년세대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 청년 참여의 실익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교류 동력 확보
 - 프로그램 참여를 취업·창업 연계 활동, 대학 학점 인정, 사회봉사 인증과 연계 등 

지속가능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방안

국민소통분과위원회

요약

□ 사회적 대화의 목표를 ‘메타합의’로 설정

- 통일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메타합의(meta-consensus) 방식 활용
- 메타합의를 통해 상대 진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함으로써 보수·진보 공존의 기반 형성

□ 비대면·간접체험 방식의 준사회적 대화 활성화

- 준사회적 대화는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시각화하고 인식 전환을 유도해 왜곡된 인식 교정에 효과적인 비대면 대화방식
- 정서적 양극화 완화를 위해 메타합의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형 교육·홍보 자료 제작

□ 지역사회와 국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기반 마련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지자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지역 생활권 단위 공감형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운영해 지역 통일담론 활성화
- 국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대화 주체로 참여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사회적 대화의 수용성 제고와 연속성 보장

□ 상호이해 제고에 중점을 둔 개방형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

- 표준화된 사회적 대화 절차를 도입하고 공개해 누구나 쉽게 주최할 수 있는 개방형 공론의장 모델 구현
-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합의도출이 아닌 상호이해 제고에 중점

□ 사회적 대화 전담 추진 조직 신설

- 사회적 대화의 기획, 운영, 기록, 환류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대화 전담 기구 신설
- 의제 발굴과 계획 수립, 행사 진행,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교육, 결과 정리와 정책 반영을 분담할 1국 4과 체계 마련

I 건의 배경

□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의 초점이 사회적 대화로 이동

- 과거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지향했으나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이 미약
 - 문재인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명시적 합의 도출이라는 단기성과에 집중하며 한계 노출
 - ※ 2018년부터 4년간 6,000명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
 -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적 보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행전략, 공론화 과정 미흡
- 급변하는 통일 환경과 국내 이념갈등 심화 상황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재정립 절실
 - 국회와의 협력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 추진 필요
 -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해 국민 53.3%가 공감한다고 응답

📖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감도 (민주평통 국민 통일여론조사, 20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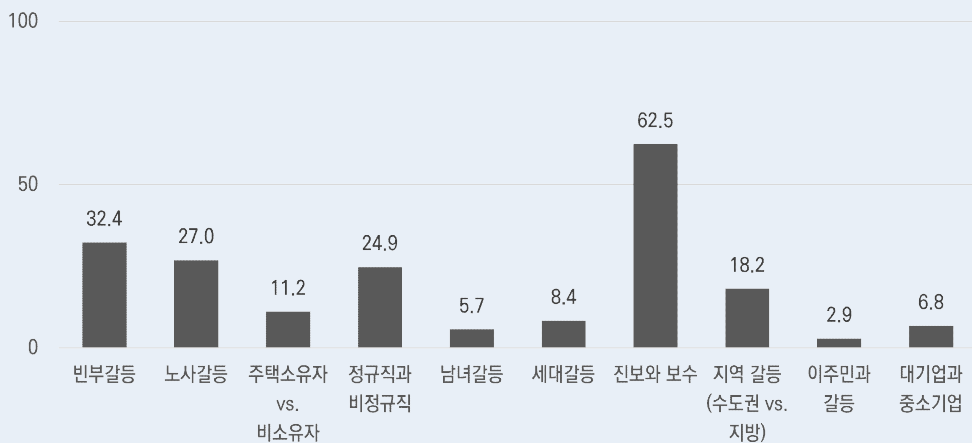
공감 53.3% > 비공감 25.7% > 보통 19.4%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갈등: 보수-진보 간 대립

-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파괴적인 갈등이라고 평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1순위(62.5%) 차지
 -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4%였으며, 10년 후에도 심각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7.7%에 육박

📖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갈등 (1, 2순위 중복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2.)



□ 통일 논의에도 이념에 따른 고정관념 심화

○ 우리나라 보수·진보 간 갈등은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갖는 ‘정서적 양극화’ 현상으로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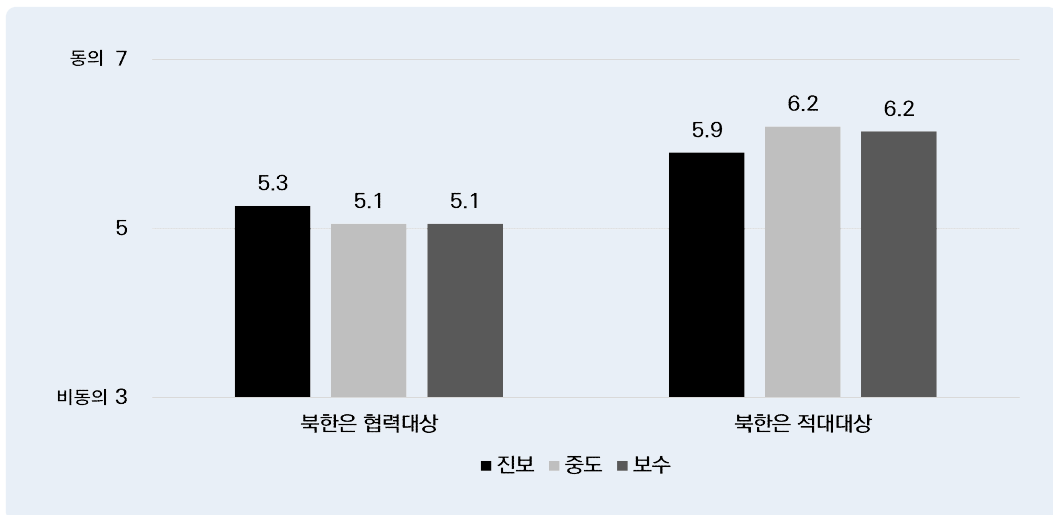
- ‘정서적 양극화’의 본질은 실제 정책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것

※ 무엇을 결정했는가보다 ‘누가 주장했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

- 진보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수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실제 진보·보수간 대북인식 차이는 미미

-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 진보와 보수 모든 이념층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우세

📄 이념에 따른 대북인식 (통일연구원 2024 통일인식조사, 2024.6.)



-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 규범 훼손, 사회적 신뢰 붕괴, 제도적 불신 야기

II 정책 건의

□ 사회적 대화의 목표를 ‘메타합의(meta-consensus)’로 설정

- 한반도 문제에 내재된 모순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메타합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통일 담론의 형성 필요
 - 김대중 정부 이래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협력 대상이자 경계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
 -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장기간 분단으로 야기된 불가피한 모순이며 한반도 문제 복잡성의 본질
 - 북한이 협력, 경계 대상인지 양자택일하는 방식이 아닌 공존 가능한 모순으로 인정해야 현실적인 통일 기반 마련 가능

❖ 통일교육 방향

- 2022년 통일교육지침
 - :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라는 점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 & 2023년 통일교육 기본방향
 - :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 ‘메타합의’는 자신의 신념과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관점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위 수준의 합의 방식

-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교정하는 과정으로 보수·진보 공존의 기반 형성
- 이러한 메타합의 방식을 사회적 대화에 적용하여 상대와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닌 공존 가능한 것으로 전환
- 정서적 양극화는 상대에 대한 혐오가 본질이므로 메타합의를 통해 상대의 관점을 인정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공감하는 기회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

❖ 합의와 메타합의의 차이

구분	합의	메타합의
정의	가치, 신념, 선호의 일치	가치, 신념, 선호의 존중과 인정
참여자 부담	자신의 가치 신념, 선호의 수정	자신의 가치 신념, 선호의 유지 가능
민주주의	이상적인 민주적 정당성	현실적인 민주적 정당성
적용상황	단순한 이익 기반 갈등	복잡한 정체성 기반 갈등
갈등해결	완전한 갈등해결	갈등 관리
결정 방식	만장일치/다수결	다양한 결정방식

□ 비대면·간접경험 기반의 준(準)사회적 대화 활성화

- 준(準)사회적 대화는 면대면 대화 없이 이루어지는 공감형 콘텐츠로 왜곡된 인식 교정에 효과적
- 직접적 설득이 아닌 관찰·체험 기반 간접 대화, 스토리텔링 방식의 콘텐츠로 고정관념을 시각화하고 공감 유도

※ ‘America’s Divided Mind’ 영상은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상호 왜곡된 인식을 조명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예를 보여주는 준사회적 대화의 예시

- 준사회적 대화를 통한 메타합의 형성 및 정서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진영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시각화하고 공감적 인식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 메타합의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형 교육·홍보 자료의 설계로 양극화 해소

□ 지역사회와 국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기반 마련

- 민주평통 지역 협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학교 등과 연계한 지역 생활권 단위 사회적 대화 플랫폼 ‘모두의 대화(가칭)’ 운영
 - 전문정보다는 경험과 감정 중심, 공감형 대화 형식을 지향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해 지역의 통일담론 활성화
 - ‘모두의 대화’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과 연계하여 시민 참여와 정책 소통 기반 마련
- 국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대화 주체로 참여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사회적 대화의 수용성 제고와 연속성 보장
 - 국회의 참여는 시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의 상징적 효과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수용성과 메타합의 형성 효과를 제고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실제 대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투트랙 접근 필요

- 사회적 대화기구에 국회의원 또는 정당 추천 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설계와 운용에 초당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시민 참여 의지와 수용성 제고

□ 상호이해 제고에 중점을 둔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

- 핀란드의 국민대화를 벤치마킹해 대화의 목표를 합의 도출이 아닌 상호 이해 형성을 목표로 설정
 -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 자체를 민주주의 학습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결과를 합의문 형태가 아닌 경험·인식 공유의 축적물로 정리
 -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대화 주제 선정, 구성, 진행 방식 결정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결정·운영하는 구조
 -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논의의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평가해야 하는 정책 과제로서 국제사회에 제시

❖ 핀란드 국민대화(National Dialogue)

- 재무부, 내무부, 총리실, 공공혁신기금 시트라(Sitra), Timeout 재단,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
- OECD 신뢰 보고서는 제도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 회복의 효과적 수단으로 OECD 공공혁신협의체는 국민대화를 참여형 민주주의 모범사례로 등재
- 국제기구의 공인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타 국가에 확산 중으로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폴란드, 독일 등이 국민대화를 시범 도입하거나 도입 검토 중

- 표준화된 대화 절차를 도입·공개해 누구나 쉽게 주최할 수 있는 개방형 공론의 장 모델을 구현

- 누구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화 절차 및 운영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공개해 사회적 대화의 개최비용 최소화

□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담 추진기구 신설 및 정책적 의지 강조

- 사회적 대화의 기획, 운영, 기록, 환류까지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내 사회적 대화국 신설
 - 의제기획과, 운영총괄과, 교육연수과, 성과확산과 등 1국 4과 체계
 - 의제기획과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의 조사, 발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기별·연도별 대화 전략 수립 및 기획 총괄
 - 운영총괄과는 실제 대화 행사의 진행 총괄 및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맡고, 교육연수과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사회적 대화 이해 교육, 진행자 워크숍, 매뉴얼 개발
 - 성과확산과는 대화 기록의 정리, 데이터화, 키워드 분석을 통한 대화보고서 작성 및 대화 결과의 정책반영, 국회·정부 전달, 제도적 환류 담당
 - 교육연수과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사회적 대화 이해 교육, 진행자 워크숍, 매뉴얼 개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민주평통 국민 통일여론조사, 2025.7.)

- 정부·국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50.7%)
- 청년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유도(17.3%)
-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 대상 공론의 장 마련(12.5%)
- 지역 기반 공론장 확대 및 운영(8.4%)

- 사회적 대화국 신설을 통해 사회적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 가시적 ‘합의’의 성과 지향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직접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정치화된 통일담론의 장에서 정부가 중립적 촉진자로 자리 잡기 위해 반복적·다채널 메시지로 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 강조
 - 대통령의 경축사·기념사(8·15 경축사, 3·1절 기념사 등)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의지를 천명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

청년분과위원회

요약

□ 사회적 대화의 명확한 목적 및 방향성 정립

-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 균형성, 객관성, 독립성, 숙의성 등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준수

□ 국민 주도 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협력하는 형태의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 대화 참가자들이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갇히지 않도록 참가자의 이념적 성향 구분 기준 재검토

□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국회의 초당적 참여와 책임 있는 여야 합의를 통해 사회통합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민 주도의 사회적 대화 속의 내용이 정부와 국회의 주된 의사결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 장치 마련

□ 실질적 숙의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사회적 이슈화 및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단일화된 숙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유
- 남북관계 상황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숙의결과 도출 및 활용

□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강화

- 자문위원을 사회적 대화 퍼실리테이터로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조정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지원
- 자문위원이 각 지역의 공론장을 실질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

건의 배경

□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역할 강조

-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와 협력 강화’ 및 ‘대국민 소통과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추진’을 공약
 - ‘분열의 정치 종식’과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 극복 시사
- ‘사회적 대화’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는 국내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안정,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적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

📖 대북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 (민주평통 국민 통일여론조사, 2025.7.)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8.9%)
-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35.9%)
-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10.6%)
-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6%)

□ ‘국민적 합의’ 배제 문제 해소와 남남갈등 완화의 필요성

- 기존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 절차 부족
- 통일인식의 다양화, 이질화로 ‘남남갈등’이 심화되며 이성적 타협이 어려운 상황

- 이념·세대별 통일·대북정책 인식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북정책 추진에 난관으로 작용
- 국민 통일 인식 격차 완화, 사회적 갈등 감소, 통합 담론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독립적 사회적 대화 추진이 시급

□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한계 극복 필요

- 문재인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을 목표로 전국 단위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일정의 성과와 한계 동시 노출
- △시민사회 주도의 한반도 비전 모색, △대화와 공론장 제도화의 가능성 확인 등 성과 도출
- △합의에 대한 압력 우위,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구성, △대표성 확보 과정의 질적 저하 등 한계 노출

II 정책 건의

□ 사회적 대화의 명확한 목적 및 방향성 정립

○ 사회적 대화의 3대 목표

- 첫째,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과 경청,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 기반의 미래지향적 통일 문화 조성
- 둘째,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균형성, 객관성, 신뢰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셋째,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 사회적 대화의 명확한 원칙 준수

- 균형성: 의제 설정, 질문, 발제, 진행에 보수·중도·진보 전문가, 활동가의 균형 있는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편향 없이 반영
- 객관성: 의제 선정 및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 제고
- 독립성: 민간 추진 기구가 사회적 대화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공공기관은 지원과 협력을 제공
- 속의성: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하되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 미개입

□ 국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대화체계 구축

- 정부와 민간 사이 관계 혹은 실질적 주체에 관한 명확한 정리 필요
 - 국민 주도·국가 지원 원칙 아래 시민사회 주도로 대화를 추진하고,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 추진위원회 결성 준비 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
 -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경험을 고려해 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
- 참가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분화된 척도 적용
 - 사회적 대화 참가자들이 이분법적 대립 구도 설정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진보-중도-보수 등 스펙트럼을 가급적 확대
 - 참가자의 이념적 성향 구분 시, 선택지를 단순화하기보다 세분화된 척도를 적용

□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제도화

- 국회의 초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논의 결과물을 사회협약으로 발전
 - 국회는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 심화된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입안·운용
- 사회적 대화 논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대화의 지속가능성 저해

-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숙의 결과가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통일담론 및 사회적 대화 의제 재설계

-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관심을 갖는 통일 관련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논의 진행
 -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해 남남 소통 구조를 재편
-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설계 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
 - 의제 및 세부 주제 선정 시, 진보·보수의 정형화된 입장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 논의된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실질적인 숙의 단계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사회적 대화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하고,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숙의 과정 유도
 -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는 기본 데이터 축적에는 기여했으나, 실질적 숙의에 한계
 -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일화된 숙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회 전체 공유 기반 마련
- 사회적 대화의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공개로 인한 신뢰성 문제 해소

□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강화

-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사회적 대화의 퍼실리테이터로 육성하여 세대·계층·지역을 연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에서 ‘갈등 조정자’, ‘공론장 설계자’, ‘사회적 신뢰 창출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자격증 연계 교육, 갈등 조정 훈련, 중재 사례 기반 연습, 정치적 중립성 검증, 지역 통일이슈 모의 대화 워크숍 등 현장 중심 커리큘럼 운영
- 퍼실리테이터로서 각 지역의 이슈별 공론장을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통일부·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퍼실리테이터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붙임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및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붙임 1

2025년 3분기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분과 건제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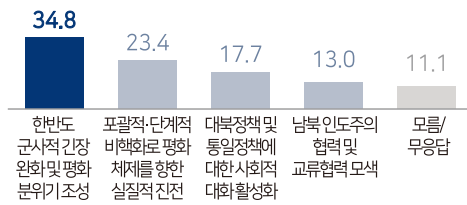
분과	일시	내용
기획·조정	6.11.(수) 10:30	• 3분기 대주제·정책건의 방향 결정 •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통일·안보	7.10.(목) 10:30	• 통일·대북정책의 도전요인과 대응방안 · 발제: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인권 탈북민지원	7.17.(목) 15:00	• 북한인권 정책 및 탈북민 지원 방안 · 발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혁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김금옥 김금옥요리전문학원 원장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국제협력	7.8.(화) 10:00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발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과학	7.14.(월) 15:00	• 남북대화채널 복원과 평화경제 여건 조성 방안 · 발제: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유원영 ㈜에스지아이컨설팅 회장 채수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김미연 한국산업은행 개발금융센터 연구위원
교류·협력	7.21.(월) 15:00	•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 · 발제: 양 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이래철 (사)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박찬숙 시도지사협의회 정책협력단 선임위원
종교· 민족화합	7.9.(수) 15:00	•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종교 분야의 역할 · 발제: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변진홍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원장 송현진 이화여대 객원연구위원 모순영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
국민소통	7.16.(수) 15:00	• 지속가능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방안 · 발제: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김희영 더좋은공감스피치 대표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7.11.(금) 16:00	• 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 · 발제: 박형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수 · 토론: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붙임 2 2025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우선 추진과제

- ▶ 국민의 34.8%,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통일정책 분야 과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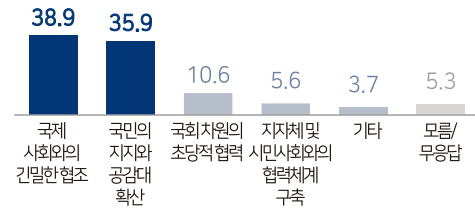
[단위 : %]



✓ 대북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

-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8.9%),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35.9%) 응답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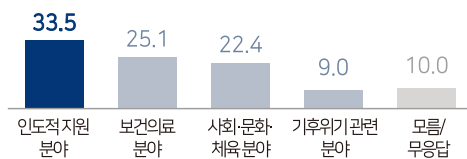
[단위 : %]



✓ 남북 교류협력 우선 추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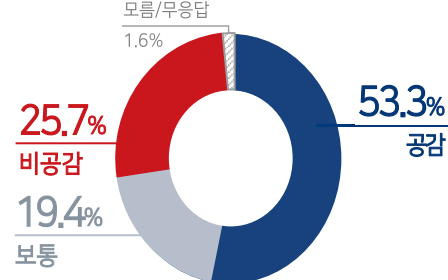
- ▶ 향후 남북 교류협력 모색 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 국민 33.5% '인도적 지원' 가장 많이 선택

[단위 : %]



✓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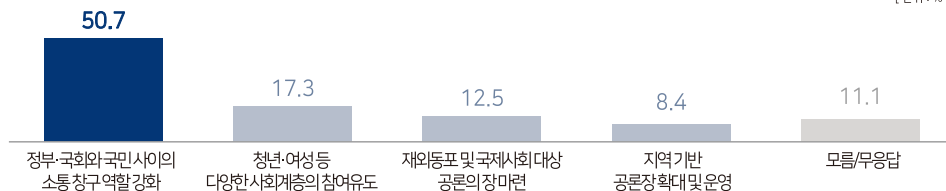
- ▶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강조, 국민 53.3% '공감' 응답



✓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통 역할

- ▶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통이 강화해야 할 역할로 국민 50.7%, '정부·국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 강화' 가장 많이 선택

[단위 : %]



조사대상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 2025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 반영,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표본 추출
- 2025년 6월 27일 ~ 29일 (3일간)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본오차 ±3.1% Point

조사방법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전화면접조사
- 가구전화(20%) 및 휴대전화(80%) RDD 방식 병행 Dual Frame

조사기관

- 글로벌알앤씨㈜



2025년 3분기 정책건의 자료집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자문건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전화번호	02) 2250-2362
홈페이지	https://www.puac.go.kr
인쇄처	이호기획
